

“5·18 모욕 만평 실은 신문사 엄벌해 달라”

대구 모 신문사, 계엄군 진압 장면을 부동산 정책에 빗대 청원인, 처벌·사과 촉구...5·18기념재단 “법적대응 검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5·18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장면을 끌어들이며 비난한 신문사의 만평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인이 제기됐다.

19일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신문사 처벌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5·18 당시 공수부대의 만행을 찍은 사진을 그대로 만

평으로 그려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대구 A신문의 법적 처벌 및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A신문은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을 하는 공수부대 군인을 건보료와 재산세 등으로 묘사해 국민을 괴롭히고 짓밟는 정부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5·18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마치 국민을 학살한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에 현 정부를 비유한 것이다”며 “만평을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마치 과거 전두환과 그 하수인이었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과 같은 피해자로 느끼도록 선동하려는 악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역사왜곡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기사의 작성자를 사법처리해 달라”며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A신문사의 모든 편집자 및 관련 인원을 모두 사법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 게시글은 20일 오후 4시 기준 1만3099명의 동의를 받았다. A신문은 지난 18일 자사 누리집에 5·18 당시 계엄군이 한 시민을 둘러싸고 진압봉으로 내려치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만평을 게시했다. 건강보험료·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의인화된 계엄군이 시민을 마구 때리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얼굴을 손으로 가린 시민 옆에는 ‘아닌 밤중에 9억 초과 1주택’이라고 쓰여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신문은 문제의 만평을 자사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게시물 삭제 조치를 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해당 만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A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 담양소방서 “찾아가는 소통행정”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지난 17일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를 방문해 담양소방서 주요 업무와 당면 현안 등을 보고 받고 업무추진에 따른 건의사항 청취와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박상래 담양소방서장과 함께 봄철을 맞아 관람객이 많이 찾는 대상인 담양 금성면의 ‘추억의 골목’을 찾아 소방시설 및 방재시스템 구축 상태 등을 점검했다. 추억의 골목은 담양군 금성면 일대에 조성된 문화·전시 시설로 70~80년대 근현대사 생활상을 주제로 재현했으며 주말 평균 관광객 700명이 찾는 관광지이다. 전시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인의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 등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마재운 본부장은 “봄철 따뜻한 날씨에 많은 사람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생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함평경찰, ‘안전속도 5030’ 적극 홍보에 나서

함평경찰서(서장 정환수)는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안전속도 5030’ 대비, 함평 군민교통(10대) 및 택시(30대) 등 대중교통에 홍보스티커를 부착, 보행자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서는 5030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97개소 교체·도로 도색 등 노면 7.05km 정비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속도위반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도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함평읍·대동·학교·나산·해보·월야 등 도시부 구간을 대상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시행 예정이며,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사진촬영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가 부과된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중 ▲소화전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는 연중 24시간 운영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정환수 서장은 운전자들에게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됨에 따른 불법 주정차를 지양하고 차량 제한 속도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기자

“정인이는 밝혔다”...마지막 증인도 법의학자가 나선다

정인이 재감정 참여했던 이정빈 가천대 교수 ‘발로 밟았다’ 의견 밝혀...살인죄 적용에 무게 입양도 살인 혐의 공판의 마지막 증인 설 듯

“정인이 사건”으로 살인 혐의를 받는 양모의 결심공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증인 역시 법의학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는 법의학자는 숨진 정인이의 재감정을 맡아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던 인물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되는 정인이 입양도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공판은 오는 4월7일과 같은 달 14일에 진행된 후 종결된다. 4월1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재판부에 장씨와 A씨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이 사건 공판 마지막 증인신문은 4월7일 이뤄진다. 마지막 증인은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지난 1월13일 장씨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여기에는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혔다. 이 교수 등의 재감정 결과가 장씨의



살인죄 적용에 핵심 근거가 된 셈이다. 결국 다음 공판도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 근거를 강화하는 증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7일 공판에는 부검의 B씨와 유창주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도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둔 증언을 이어갔다. B씨는 정인리와 같은 신체 손상은

적추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한다며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고, 유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들과 이 교수 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살인죄 인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장씨나 A씨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민정기자

광양경찰, 실종자 조기발견 골든타임 확보 위한 업무협약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광양우체국, 바르고 등광양점, 광양읍점과 함께 ‘배달부 정보 전파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종자 발생 시 우체국, 배달서비스 업체의 정보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실종자 조기 발견과 장기 실종자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는 매년 늘어나는 치매노인 인구에 따라 증가하는 실종자에 적극 대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광양경찰서는 그동안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위치확인 가능한 배회감지기(174대) 배부, 배회 실종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사전 지문등록(5,127건), 안심팔찌(145대) 보급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앞으로는 집배원, 라이더의 기동성과 광범위한 지역의 신속한 수색 효과가 더해져 보다 완벽하게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기대하고 있다. 김중호 광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노인 등 실종우려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양우체국, 바르고와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으며, 실종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